

#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09,10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09 | Vol.10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감사의 마음으로 깊은 ‘情’을 느껴보세요!

툭, 툭, 툭 내리는 빗줄기에 무더웠던 여름이 씻기고  
우리네 마음이 풍성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그렇습니다.  
문득 잊고 있는 사이 찾아와  
서로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봄에 씨를 뿌려 더운 여름을 견디고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  
땀 흘리며 열심히 달렸던 우리에게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여유 하나, 생겼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처럼  
참 열심히 살아온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변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깊은 정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열심히 땀 흘렸던 국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感謝



09 | 10 2009 | Vol.10



## 특집

## 청렴리더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한 세상 만들기!

|                                            |    |
|--------------------------------------------|----|
| ACRC Focus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 세상을 꿈꾼다!          | 06 |
| ACRC Interview   “부패 척결 지름길이요? 일관된 법집행이죠!” | 08 |
| ACRC Issue I   아·태지역 하나 되어 청렴 정책을 논하다!     | 10 |
| ACRC Issue II   한국 정부, 태국에 선진 청렴 정책을 전수한다! | 11 |

## 통

## 소통

|                                             |    |
|---------------------------------------------|----|
| 해외 청렴 리포트   “모든 걸 공개하라” 스웨덴 반부패의 힘          | 14 |
| 국민생활공감                                      |    |
| 솔로몬의 선택   부하직원 구하다 순직한 것이 ‘규정위반’ 이라고요?      | 18 |
| 고충처리 카페   결식아동 무료급식 대상자 확대                  | 20 |
| 민원실 풍경   서민 두 번 울리는 불법 사금융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 22 |
| 행복한 정책 이야기   행정규칙 개선으로 국민 생활이 편해졌다          | 24 |
| 기분 좋은 편지   행복이라는 선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26 |
| 기분 좋은 만남   둥!둥!둥! 이동신문고를 올려라!               | 28 |
| 청렴예찬   부패방지 종합시책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한국전력공사(KEPCO) | 30 |
| 아름다운 약속   특혜의 배제                            | 33 |

## 感

## 여유

|                                      |    |
|--------------------------------------|----|
| 세상사는 풍경   토요일에는 나눔이 있는 장터로 고! GO!    | 36 |
| 여행의 재발견   풍요로움의 땅, 청백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 흥성 | 38 |
| 문화로 보는 세상   희망의 종자돈을 빌려 드립니다!        | 42 |
| 돈 버는 방법   서민이여, 정부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     | 44 |
| 생활법률110   어린이 교통사고 슬기롭게 대처하자!        | 46 |
| ACRC NEWS                            | 48 |
| 국민 참여 마당                             | 50 |



# Clean World, Clean Korea 청렴리더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한 세상 만들기!

국제통화기금의 총재 제임스 울펜슨(James Wolfensohn)은 말했다. 부패는 '암' 과 같다고.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듯 부패를 빨리 척결하지 않으면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 있는 비유였다. 우리에게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만의 부패척결을 넘어, 전 세계적인 화두인 '반부패'에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반부패기구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6~17일에 걸쳐 '2009 APEC 반부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 현장을 따라가 본다.

- \*06 ACRC Focus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 세상을 꿈꾼다\_APEC과 함께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최
- \*08 ACRC Interview “부패 척결 지름길이요? 일관된 법집행이죠!” \_ 돈 팩스 미국 정부윤리청 부청장
- \*10 ACRC Issue I 아·태지역 하나 되어 청렴 정책을 논하다! \_ 아·태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 개최
- \*11 ACRC Issue II 한국 정부, 태국에 선진 청렴 정책을 전수한다! \_ 한-태국 반부패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09 APEC Anti-Corruption & Transparency Symposium

September 16 ~ 17, 2009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CRC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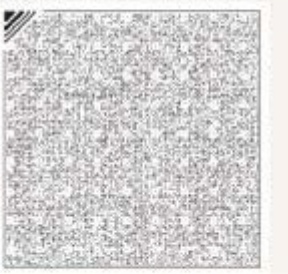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 세상을 꿈꾼다!

## APEC과 함께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최

사랑만 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패에도 국경이 없다. 부패의 폐해는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공동으로 9월 16일, 17일 이틀에 걸쳐 「2009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9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가 APEC의 까다로운 자금 지원 심사를 통과한 후,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개최되었다. 이번 반부패 심포지엄은 성공적인 반부패 기술지원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것이다. 심포지엄에는 APEC 회원국을 포함한 23개국 정부 대표와 유엔, 세계은행, 국제기구 반부패 전문가 등 관련 주요 인사 약 280명이 참석하였다.

심포지엄 주제는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국제기구, 기술지원 공여국 및 수원국 등 부패방지 정책 주체들이 반부패 역량배양을 위한 노하우와 전략을 공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심포지엄은 박인제 사무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박인제 사무처장은 “부패는 국경이 없으며 부패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PEC 역내 국가들은 부패방지 역량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부패방지 및 통제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각국이 효과적인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은 3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날에는 ‘반부패 역량강화와 반부패기구의 역할’과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수준 진단 및 대응’이란 주제로 2개의 세션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공유’라는 단일 주제로 16명의 발표자가 각자의 우수 사례와 정책을 발표했다.

16~17일 이틀 동안 열린 「2009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APEC 회원국들과 반부패 우수 사례 및 기술지원 경험을 공유·논의함으로써 개도국의 반부패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동 분야 기술지원사업의 확대·체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반부패 역량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 지원과 개발 원조에 대한 우리정부의 책임의식과 실천을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 ◎ 2009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주요 참석자 발표 내용 ◎

### 제럴드 크립스(Jerrold Cripps)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州) 부패방지청장

호주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주정부차원에서 부패방지 기구가 발달되고 부패방지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점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 부패를 통제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 돈 팩스(Don W. Fox)

미국 정부윤리청 부청장

재산공개, 교육훈련 등 공직자의 이익충돌 예방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법을 통한 순응만으로는 이익충돌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정무직의 윤리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정부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은 하나의 법집행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형태가 아니라 검찰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국민권익위가 협력하여 대응하는 체제로 한국의 문화와 정서적 특성이 반영된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 마이클 콘(Michael D. Kohn)

미국내부공익신고자센터 회장

강력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내부감사나 엄정한 법집행과 같은 다른 영역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반부패 시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기관에게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각 기관의  
청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던가 기관의  
윤리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것은 국민권익위 업무와  
유사합니다”

## “부패 척결 지름길이요? 일관된 법집행이죠!”

돈 팩스(Don Fox)

미국 정부윤리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부청장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과거 워싱턴 정가에서 문제됐던 ‘회전문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집무 개시 첫날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좇아 반부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미국 정부윤리청이다.

9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2009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에서 사회를 맡은 미국 정부윤리청의 돈 팩스(Don Fox) 부청장을 「국민권익」지가 만났다.

### 반부패 정책, 만능해법은 없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팩스 정부윤리청 부청장은 모든 국가, 모든 문화, 모든 상황에 적용시킬수 있는 만능해법은 없지만,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일관된 법 집행 하나만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적을 불문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법률을 만드는 데는 소극적이라며,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가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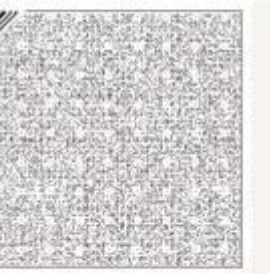
### 미 공직자, 퇴임 2년 내

#### ‘로비목적’ 전직장 동료 만남 금지

팩스 부청장은 어떤 정부든 정권 초기에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리 규정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가에도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도 그럴 것이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로비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공직에 임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일정 기간 동





안은 퇴임 직전 근무했던 부처의 직원을 로비 목적으로 만나는 것도 금지됐다. 고위 공직에 있다가 퇴임 전 몸담던 부처의 로비스트로 ‘변신’ 하던 오랜 관행이 마침내 철폐를 맞은 것이다.

#### 미 정부윤리청,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행위 권한

미국의 정부윤리청은 행정부 소속의 133개 기관, 4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과 군인들의 윤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익충돌 예방업무와 공직윤리를 전담하는 정책기관이라서 조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각 기관의 감사관에게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조사권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법 처벌기능은 없지만 대신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강등, 감봉 등 징계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윤리청에도 한국의 국민권익위와 비슷한 업무가 있단다.

“정부 기관에게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기관의 청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던가 기관의 윤리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것은 국민권익위 업무와 유사합니다.”

그에 따르면, 미 정부윤리청은 52만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미 공무원들에게 공직윤리 훈련을 시키고, 600~700명 정도의 윤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팩스 정부윤리청 부청장은 “윤리 준수약속은 공무원의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미국의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한국도 보다 강력한 반부패정책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아·태지역 하나 되어 청렴 정책을 논하다!

국민권익위, 9월 15일 아·태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 개최

반부패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반부패기구 간 상호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 5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ACA: Anti-Corruption Agency)를 개최했다.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등 ACA 포럼 회원국과 태국, 필리핀을 비롯한 비회원국 등 10개국의 반부패기구 기관장 및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5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기관장회의' (ACA 포럼)에서는 부패척결 및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서울선언문' 이 채택되었고 필리핀이 새로운 ACA 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반부패기구 기관장들은 '서울선언문' 을 통해 부패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부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반부패기구의 역할 확대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반부패기구 간 협력 증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참석자들은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우수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교육훈련을 상호 제공하며, △부패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 정책 사례로 △한국의 청렴도 측정, △호주의 공공부문 부패취약도 연구(Profiling the Public Sector), △홍콩의 윤리개발센터(Ethics Development Centre), △인도네시아의 멀티미디어 교육·홍보, △말레이시아의 반부패교육원(Anti-Corruption Academy), △싱가포르의 민간부패 수사 등을 꼽기도 했다.

ACA포럼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회원국 간 원활한 정책 교류와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까지 ACA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원국들이 반부패 우수사례와 반부패정책, 기구 동향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반부패 정보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반부패 제도 지원국과 수원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 한국 정부, 태국에 선진 청렴 정책을 전수한다!

한-태국 반부패협력 양해각서 체결

지난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자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제사회에서도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반부패 협력사업의 성과에 주목한 태국 부방위가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우리의 우수 반부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국민권익위에 협조 요청을 해옴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2006년 인도네시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반부패 협력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2007년~2008년 부탄, 방글라데시를 대상으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펼친 바 있다.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국은 △부패예방 분야의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 △공동조사와 연구 수행, △세미나와 심포지엄 개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홍보활동도

적극 펴기로 해 향후 반부패 분야의 활발한 양자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는 태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通, 소통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는 삶의 풍요로움이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분명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가위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 14 | 해외 청렴 리포트
  - 18 | 솔로몬의 선택
  - 20 | 고충처리 카페
  - 22 | 민원실 풍경
  - 24 | 행복한 정책 이야기
  - 26 | 기분 좋은 편지
  - 28 | 기분 좋은 만남
  - 30 | 청렴예찬
  - 33 | 아름다운 약속





# 모든 길 공개하라

## 스웨덴 반부패의 힘

바이킹의 후예, 축구 잘하는 나라, 북유럽 기계·항공 산업의 첨병... 누구나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스웨덴의 대표 심벌들이다.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이 나라가 축구나 기계·항공 수준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가우뚱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손꼽히는 핀란드 옆 나라라서 높은 청렴도 역시 쉽게 전파됐을 거란 상상을 감안하더라도 '설마 1위까지야...'란 대중의 추측은 여지없이 오판이 되기 일쑤다.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등 대략 30만 원의 생필품을 공공카드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부총리를 낙마시킨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다'고 항변해도 일절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스웨덴 국민들이다. 이처럼 스웨덴이 청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손꼽아보자.



스웨덴 부패인식지수의 톱클래스 랭킹이 고작 최근 몇 년간 반짝한 결과물이라 여긴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익숙해진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스웨덴은 무려 24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성문화했다. ‘정보공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웨덴 성직자 안데르스 쉬데니우스(1729~1803) 주도로 1766년 12월 2일 제정된 「출판언론자유법」이 그 시초로, 18세기와 20세기에서 한때 폐지되거나 크게 위축되기도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공개법으로 승화,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 개 나라로 확립시켰다.

스웨덴은 헌법으로 정보공개와 청구권 등 정보자유권을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광범위한 의회·행정·사법 자료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뤄진 편지나 관련 기록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 시민 청구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의회, 중앙·지방정부, 각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세를 낸다’는 이유로 교회 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공개토록 한다. 특히 자의적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에 「기밀보호법」도 제정, 명확히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는 빠짐없이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한국에선 흔하디흔한 기자-공무원간 자료 숨바꼭질 전쟁도 스웨덴에서는 먼 나라 얘기다. 언론에 대해 ‘취재원 비닉권(秘匿權)’을 인정, 공무원들이 공익 목적의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정부 방첩과 달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일반에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국가기밀 등은 제외하고 글과 사진을 언론에 제공할 수 있고, 해당 공공기관은 공무원에 대해 내사능력 징계권도 가질 수 없다. 이 같은 정보공개 전통이 뿌리를 내리면서 스웨덴은 유럽에서 탐사보도 수준이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스웨덴 대검찰청 반부패과 요한슨 검사는 “공무원이 아침에 친척에 특혜를 줄 경우 그날 오후 석간신문에 기사가 다 나갈 정도”라면서 “설사, 음해성이 농후한 민원, 조사만 된 내용들도 원칙적으로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내 모습 2. 스웨덴 경찰이 스톡홀름 아란다(Arlanda) 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불법 정차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3.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JO)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4. 시내에서 작은 음악회를 갖는 스웨덴 시민 5. 자치경찰제에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스웨덴 경찰 6. 스톡홀름에서 쇼핑을 즐기는 스웨덴 시민들  
7. 매츠 멜린 JO 수석 옴부즈만(왼쪽)과 마리안 폰 데르 에쉬 JO 국제과장

## 200년 시민 신문고, 옴부즈만

‘대리인’이란 뜻으로도 유명한 ‘옴부즈만’도 스웨덴이 원조다. 18세기 말~19세기 초 왕정 집권 제에 정면 도전했던 시민혁명의 줄기가 1809년 옴부즈만으로 싹트고, 200년간 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해온 본질적 기능은 절대 훼손되지 않은 채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노조, 은행, 보험회사, 언론 등 수많은 옴부즈만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의회 옴부즈만이다. 저스티스 옴부즈만(Justice ombudsman)에서 파생돼 ‘JO’로 약칭되는 의회 옴부즈만은 근원적으로 조세·군대·행정법원·각급 법원·검찰·검찰·교정 분야 공무원들의 부정을 발견해 처벌하는 것이 본디 임무다.

해당 정부 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 국민들의 개별적 비리민원 제기나 신문·잡지 등에 게재된 심층 해부 기사 등을 통해 촉발된 장기 조사업무, 국민들의 비리 민원 처리 등이 주요 업무 권역이다.

비록 일부 변형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JO는 인접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물론 한국 등 전 세계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가 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본류 JO에서는 공무원 범죄의 기소 건수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죄종도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컨대, 검찰이 실형을 받을 이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사·재판과정상 시간을 끌 경우 JO의 징계·소추 대상이 되며, 이마저도 1년에 많아야 5~6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900만 명 스웨덴 인구를 감안할 때, 이 나라의 권한 남용 실태가 어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JO도 일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엄연히 감시를 받는다. 의회 내 헌법위원회가 바로 상급조직이다.

하지만 타 국가 옴부즈만 대부분이 별도의 감독기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 JO는 같은 의회 조직이 감시할 정도로 독직이나 불법관계가 사실상 ‘0’이란 점을 잘 알 수 있다.

JO의 멜린 수석 옴부즈만은 “JO를 상대로 모든 행정조직이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만큼 젊은 검사들이 소신 있게 일한다”면서 “스웨덴과 관계된 일이라면 해외 어디서도 민원제기를 할 수 있으니 관심과 기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JO(Justice ombudsman)를 상대로 모든 행정조직이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만큼 젊은 검사들이 열성껏 소신 있게 일한다 ●●



#### 될성 그른 싹 걸러내는 경찰

스웨덴 반부패 활동에서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분야가 바로 경찰이다. 유럽 우수 국가들과 달리 스웨덴 경찰은 1965년 자치경찰제에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대륙법계의 원조,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자치경찰의 길을 걸었고, 자치경찰의 롤 모델 영국에서도 굳건히 내무부장관 직속의 준(準)국가경찰제를 유지해왔던 수도경찰청 역시 1998년 완전 자치경찰로 탈바꿈한 전례를 감안할 때 스웨덴 경찰의 행보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스웨덴은 왜 이 같은 엇박자를 자처한 것일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스웨덴의 ‘생활 속 반부패 전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공공기소자직(검찰 등)과 압류담당관직(국세 등)을 겸직했던 대다수 도시 자치경찰청장들은 국가경찰 전환 후 오로지 경찰업무만 직접 담당케 됐으며, 무엇보다 중구난방이었던 경찰임용과 교육훈련의 질이 제대로 갖춰지게 됐다.

간부직의 경우 2년 6개월, 일반 경찰은 무려 5년에 가까운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스웨덴 경찰의 교육훈련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실한 치안서비스 제공은 물론 ‘될성 그른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잘라낸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한국 경찰도 이에 착안, 현행 6개월인 신입 순경 교육기간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지난 7월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경찰관리의 중앙집중화 등 국가경찰에 대한 수많은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와 의회 옴부즈만, 의회 회계감사원, 법무총감실, 국가회계감사원 등 무려 5곳에 이르는 경찰감독기관과 2만여 명 경찰노조를 보장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우리는 경찰 감시와 경찰 권익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단 몇 분간의 불법 정치에도 가차 없이 딱지를 떼어버리고 적발 운전자 역시 ‘봐 달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는 스웨덴 치안 현실은 분명 세계 1위 반부패 사회 기저의 한 축임이 분명하다.

적어도, 스웨덴에서 바라봤을 때 반부패 활동에는 절대 거창한 수식어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부패방지 공무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스웨덴에 결코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막연한 동경과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운전면허 감독관과 응시자와 결탁해 감독관이 받을 두 번 두드리면 답이 2번이라는 식의 부정을 대(大)사건으로 꼽는 이들의 심각한 얼굴은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과연 반부패 활동을 생활 속 진부한 원칙으로 확립하고 있는가. 일반 형법상에 직접 ‘골프, 사우나, 사냥 등 비공개 접대를 금한다’는 개별적 수권조항을 삽입한 스웨덴 사람들은 오늘도 “가장 놀라운 부패는 시민 옆의 경찰과 공무원이 조그만 일에도 대가를 받는 것”이라 외치고 있다. 🌍



# 부하직원 구하다 순직한 것이 ‘규정위반’이라고요?

안전장비 미착용했다고 공무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것은 부당

## 안 전 장 비 없 이 들 어 간 맨 홀 에 서 질 식 사 고 발 생

지난해 9월, 하수처리장 시설운영팀의 총괄관리를 맡고 있는 김씨는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될 추석연휴를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장내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다. 김씨의 부하직원인 장씨와 한씨 또한 같은 마음으로 작업장 순찰을 돌며 점검 중이었다.

그러다가 맨홀이 슬러지(하수처리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로 막혀 있는 것이 장씨의 눈에 띄었다. 장씨는 배수관을 뚫어보겠다며 방독면이나 분진마스크도 없이 바로 맨홀로 들어갔다. 얼마 후, 동료들의 구조 요청 외침이 들렸고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김씨가 그 소리를 듣고 제초기를 내팽개치고 한달음 내달렸을 때에는 이미 장씨가 유독가스(황산수소)에 중독되어 실신한 후였다. 얼마나 긴박하고 위급한 사고인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일단 실신한 장씨를 맨홀 밖으로 꺼내는 일이 급선무였기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상사이자 팀장인 김씨가 자진하여 맨홀로 내려갔다. 그러나 장씨를 일으키려는 순간 김씨 역시 강력한 유독가스에 노출돼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장씨와 김씨 모두 질식사하고 말았다.

## 안 전 수 칙 에 위 배 ? 위 급 상 황 에 서 의 불 가 피 한 행 동

김씨의 아내인 오씨는 이후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등 남편의 죽음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현행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오씨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되 순직유족





생사의 기로에 선 부하직원을 구조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미망인이 순직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해당 공무원이 안전장비 없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인명구조활동의 기본수칙을 어긴 중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순직유족보상금은 절반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시도된 인명구조행위가 과연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들어보자.

보상금은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구조작업을 하다 사망함으로써 인명구조 활동의 기본수칙을 위반하였고, 부하직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를 소홀히 해 부하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맨홀 작업은 부하직원의 판단에 의해 우연히 진행된 점 △김씨가 약 100m 떨어진 장소에서 별도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안전장비가 있는 사무실이 30여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안전장비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구조가 지연될 경우 부하직원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취한 행동이라는 점, △업무분장표상 김씨에게 부하직원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망인 오씨는 유족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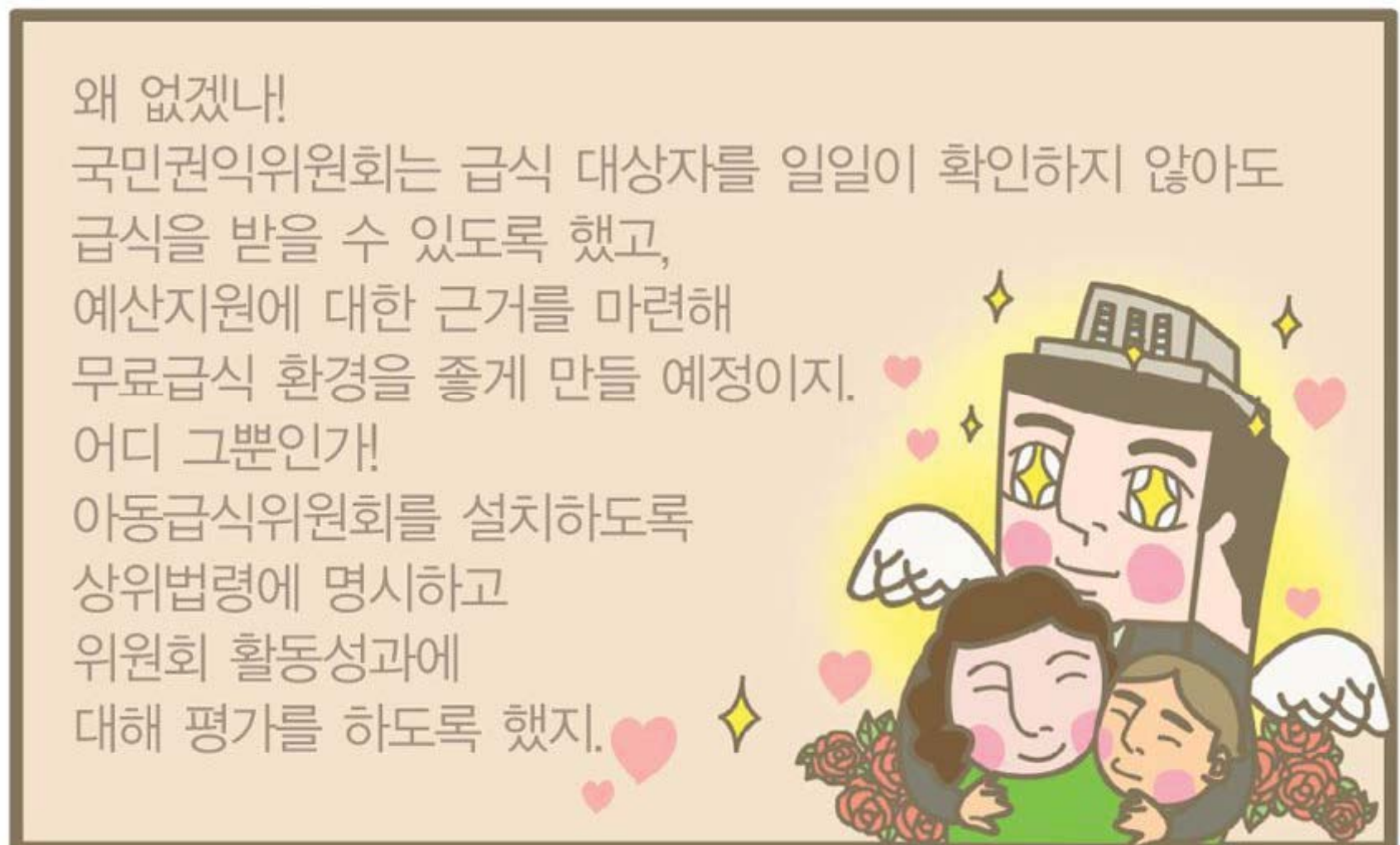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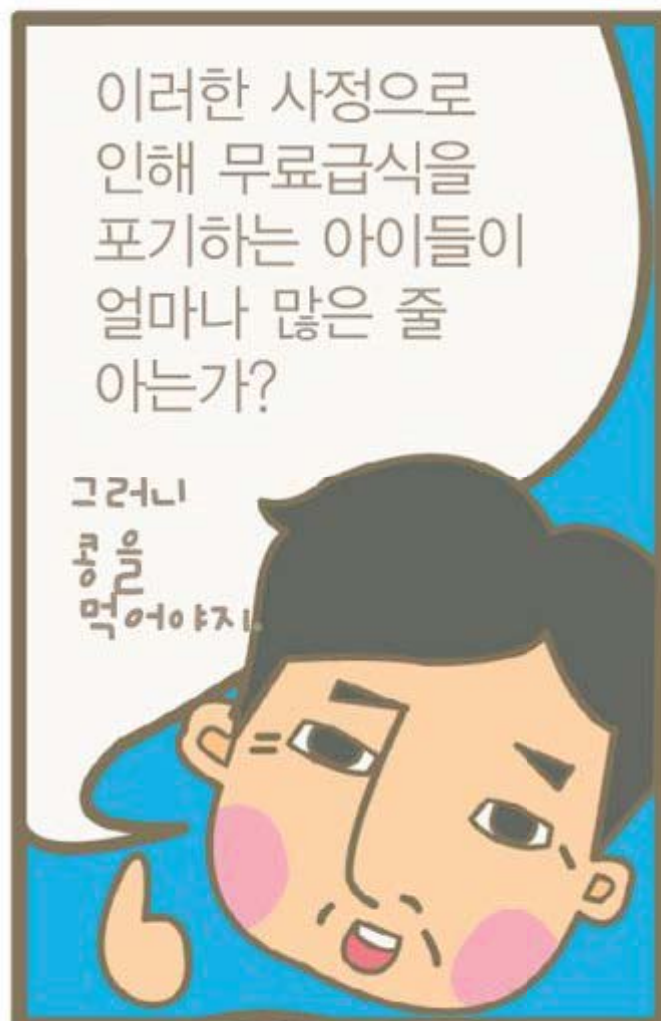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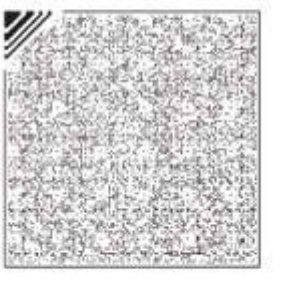




(5) 결식아동 무료급식 대상자 확대









# 서민 두 번 울리는 불법 사금융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110콜센터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9,766건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통해 피해예방 노하우 발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J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자금 200만 원이 급히 필요했고, 모 대부업체를 통해 손쉽게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점점 생활이 더 어려워져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게 되었고, 대부업자가 밤늦게 집을 찾아와 “내가 아는 건달이 많거든, 너 가만 안둘거야!”라며 협박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중에는 피해를 입고도 대처방법을 몰라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말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불법 사금융 구분 요령을 숙지한다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을 테니.

## 불법 사금융 사례

민원인 H씨는 2008년 1월경 하루 1만 3천 원씩 100회(연 199.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출했다. 2009년 2월 초 하루 2만 원, 총 60회(연 225.7%)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다시 대출받았는데 연체가 되자 대부업자가 술을 먹고 아이들만 있는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민원인 어머니의 목살을 잡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하였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대출받는 이들이 늘었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대출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9,667건에 대해 분석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별로 여자 55%, 남자 45%였고 △연령대로는 30대 34%, 40대 26%, 20대 18%, 50대 1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54%, 부산 9%, 인천 6% 등이었고 △직업별로는 개인사업자 46%, 직장인 22%, 가정주부 1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자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사례 1,501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피해상담이 전체 불법 사금융 상담의 77.2%였으며, 이 중 100만 원 이하 대출금액에 대한 피해상담도 22.4%나 돼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대부분이 소액대출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사례 1,501건 중 1,393건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미등록 업체의 폐해가 심각했다.

또한 대출금리는 연 100% 이상이 전체 80.9%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금리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상담사례 95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대출금의 15.3%(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 1,368건에서는 △언어폭력·협박·신변위협 721건(52.5%), △가족·친지 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422건(30.8%),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 189건(13.9%)으로 이중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경우도 28건이 포함되었다.

## 불법 사금융, 이렇게 대처하세요!

첫째,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다. 대부업 영업소가 있는 시·도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구체적인 등록정보(대부업등록번호, 사무소위치, 대표자 등)를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이자율 준수 여부 및 계약 관계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긴다. 이자율이 연 49%를 초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

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110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한 모든 금전지급·변동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한다.

셋째, 불법 채권추심에는 적극 대처하여 피해를 줄인다. 폭행, 협박, 불법적인 채무사실 통보 등 불법 채권추심의 주요 유형을 숙지하고, 녹취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넷째, 중개수수료 및 선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한다. 「대부업법」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행위이므로 수수료 요구 시 거부하거나, 계속 요구해 지급하였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110콜센터)에 신고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본인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 정보 수집 및 대출가능 여부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한다.

다섯째, 카드연체대납 및 카드깡은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카드연체대납은 고액의 수수료,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사용료 발생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카드연체를 막고자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기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며, 불가피하게 연체대금을 대출받아야 할 경우 적법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본인이 직접 카드대금을 납입한다.

여섯째, 개인 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상담에 응하면 안된다.(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

### ◎ 불법 사채업자 구분요령

대출하기 전 불법 사금융 구분요령 등을 미리 숙지해 불법 대출의 늪에 빠지지 말자. 또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110콜센터에 전화해 신고와 구제방법 등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필요 시 110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해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

- ① 대부분 미등록 업체임에도 등록된 대부업체로 사칭함
- ②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인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
- ③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백지 대출계약서나 약속어음을 작성함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표준 대부약관을 사용하지 않음
- ⑤ 대출상담시 사무실 주소나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함
- ⑥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과대광고를 게재함
- ⑦ 각종 명목으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을 과도하게 떼고 대출금을 지급함





# 행정규칙 개선으로 국민 생활이 편해졌다

## 행정규칙 개선 1년 성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정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활동 1년이 지난 현재, 37개 부처의 행정규칙 1만 1천여 개 중에서 9,028개를 정비해 진도율이 82%에 달한다. 어떤 행정규칙이 어떻게 개선되었을까? 우리 생활은 어떻게 편해지는 걸까? 국민권익위의 행정규칙 개선 1년의 과정과 성과를 알아보자.

### 친서민정책, 행정규칙 개선으로 시작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과 행정절차 등을 규율하기 위해 운용되는 고시·훈령·지침 등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현대 행정에서는 법률 이상으로 국민 생활이나 행정조직 내부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민과 영세소상공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령보다도 오히려 행정규칙이다. 이번 정비대상의 선정기준과 목표는 크게 5가지다. △재량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정책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기준 현실화, △특혜·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 경쟁 유도,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가져오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부담 완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개선팀은 이같은 선정기준으로 27개 기관의 행정규칙 6,045건을 검토 분석하여 1,13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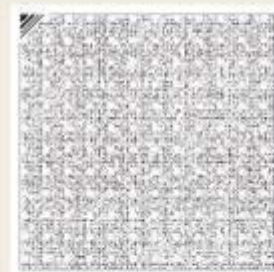
행정규칙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직접 산출이 가능한

69건만으로도 연간 10조 1,137억 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친서민정책 관련 개선은 150여 건인데, 국민가계·소상공인 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약 1조 6,508억 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및 친서민 관련 개선 주요내용을 알아보자.

### 행정규칙의 종류

|    |                                                                                                                        |
|----|------------------------------------------------------------------------------------------------------------------------|
|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br>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규정                                                     |
|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br>예)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
|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br>예)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 지침 | 사무관리규정에 규정된 문서형태는 아니고,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로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br>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공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





# 국민불편, 이렇게 개선돼요!

## ○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공업단지인 농공단지는 시·군·구별로 최대 166만㎡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농공단지의 지정면적을 확대하면 2009년에 전국적으로 약 6,09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716명의 고용이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200만㎡내에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 ○ 2012년부터 모든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는 국가가

육성회비로 알려진 학교운영지원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1997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중학교는 아직도 학생 1인당 연평균 22만 원 수준인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서 받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 교육비가 연 4,000억 원 경감된다.

## ○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은 쉽게

주로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한도는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중앙회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생계형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대출은 대출한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높아져 경제위기를 맞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유통이 쉬워진다.

## ○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

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선택권이 처방 의사에게 있다. 때문에 관례상 제약회사에서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손해가 가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인이 특정 의약품 사용조건으로 금전이나 향응을 받는 경우의 처벌조항(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을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

## ○ 휴일 당번 약국제 법령화

휴일 당번 약국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홍보부족으로 국민이 휴일에는 영업하는 약국을 찾기도 어려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 당번 약국제를 법령화하고 ☎139(응급의료센터), ☎129콜센터, 네이버 '당번약국'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당번 약국 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

## ○ 전국대표번호도 번호 이동 가능

번호이동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가 변경되어도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 착신과금 서비스가 번호이동이 허용되는데, 전국대표번호(1588, 1577, 1588, 1544 등)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대표번호를 번호이동에 포함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입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300억 원이다.

## ○ 편의점 폐업할 때 재고상품 처리 편해져요

편의점 가맹업자는 그동안 계약이 종료되거나 폐업 시 재고상품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반품을 받지 않아 직접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종료 후의 부담 항목에 '계약종료·폐업 등으로 인한 재고물품의 처리방안'을 기재하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연간 약 560억 원의 소상공인 손실액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제한 완화

노동부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직장경력을 쌓게 하고 정규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현행 지침상 '3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을 경우' 이 제도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오히려 참여율을 제한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 규정을 '1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을 경우'로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실업자가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 인터넷 소액쇼핑도 맘놓고

통신판매는 주로 책, 생필품, 화장품, 의류 등 10만 원 안팎의 소액 거래가 상당히 많은데도 안전구매를 보장받지 못해 피해가 많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제도'의 적용범위를 1회 결제 시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상으로 하향 적용하여 소액거래의 안전구매를 보장하기로 했다.

※ 행정규칙 정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http://www.acrc.go.kr) → 위원회 자료 → 행정규칙 개선·정비)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선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장대환 사무관님께

장대환 사무관님, 그동안 무탈하셨는지요. 장 사무관님의 도움으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22일, 장대환 사무관님께서 ‘이동신문고’ 행사로 전주시청에 오셨을 때 제 아들이 의료용 침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던 김영자입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사무관님을 만나기 전 아들에게 꼭 침대를 갖게 해주고 싶어 동사무소와 의료공단을 수차례 오가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지적장애와 신체장애 그리고 언어장애, 난치성 간질, 뇌병변을 갖고 있는데도 침대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왜, 의료용 침대는 노인요양급여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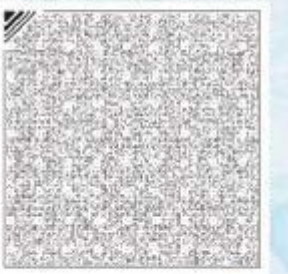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이 이동신문고가 열린다며 전주시청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장 사무관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집에 아들이 혼자 있기에 허둥거리며 민원을 접수하는 제 모습을 보신 장 사무관님께서 다가오셔서 “누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셨죠. 그 때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왔어요” 라고 말하니 사무관님께서 “무엇을 건의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되물으셨죠. 사무관님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제 아들에게 필요한 의료용 침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입원할 때나, 퇴원할 때 그리고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갈 때를 제외하곤 외부출입을 못하는 아들에게 의료용 침대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이라는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안타까우셨는지 사무관님께서 “이 주소, 이 전화번호가 맞나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보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희망을 한 가닥 잡은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는데 국민권익위 직원 한 분과 전주시청 직원 두 분이 저희 집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제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시며 이것저것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심스레 질문하시는 그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시청에서 '의료용 침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딸에게 이 소식을 문자로 보냈더니 역시나 좋아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침대를 놓을 장소를 그리는 딸의 모습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이런 마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식구에게는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후, 장 사무관님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내라고 파이팅을 외쳐주셨을 때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요즘 저는 제 아들 얼굴을 볼 때, 그리고 침대를 볼 때마다 장 사무관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이 지면으로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

2009년 7월 26일

현태(가명) 엄마 김영자(가명) 올림



**고 마 워 요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민원을 해결하셨던 분들의 가슴 따뜻한 사연을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우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 홍보담당관실 <국민권익> 담당자 앞 e-mail : soljy@acrc.go.kr



通

국민  
생활  
공감

●  
기분  
좋은  
만남

2018

ACRC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글 — 김선화  
사진 — 박성희



방방곡곡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지난 7월, 이동신문고운영팀의 일원으로 전북 전  
주시를 찾은 장대환 사무관을 만나 이동신문고 이  
용 방법과 취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 둥! 둥! 둥!

## 이동신문고를 울려라!

상담안내담당관 장대환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기관이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어떤 곳인지 홍보하고 서민들의 어려움과 고충 등 좀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해드리고자 ‘이동신문고’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지방에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에 귀기울이는 이동신문고는 서울에 있는 국민권익위 민원센터에 직접 찾아오기 힘든 소외계층이나 어려움을 겪고서도 어디다 연락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고충민원 무료상담 제도이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각 시청이나 군청에 상담 장소를 설치해 3박 4일 동안 진행한다. 올해 들어 이동신문고가 방문한 곳은 충북 청원군을 시작으로, 충남 공주시, 경남 창원군·진주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의 14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총 63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하지만 아직 이동신문고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장대환 사무관은 이동신문고의 역할을 홍보와 방문 계획을 기획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신문고에 참여한 10여 명의 조사관들이 3박 4일의 출장기간에 좀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영, 부대 행사 진행 등 보이지 않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동신문고는 법률상담을 비롯해 농림·환경·주택·건축·도시·도로교통·산업·재정·세무 등 13개 분야의 변호사를 비롯한 국민권익위의 우수한 전문조사관들이 모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느 분야의 민원인지 판단한 뒤 해당 분야 조사관을 지정하고, 당일 해결이 가능한 민원과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민원을 구분하여 최대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 모두가 웃는 그 날을 위해

장 사무관은 이동신문고 업무를 담당하기 전 주택건축민원과에서 민원을 해결했었다. 그때는 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2~3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민원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특히 소외계층의 민원이 많다 보니 마음이 짝~해지는 경우가 많다. 전북 전주시에서 만난 ‘기분 좋은 편지’의 주인공이 기억에 남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본지 26쪽 ‘기분 좋은 편지’ 참조)

“그분은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는데 병원에 갈 때 빼고는 외출할 기회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의료용 침대라도 마련해 창문을 통해서라도 바깥세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침대를 구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원받을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애절한 모정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의 민원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주시청과 봉사단체에 연락하여 그 모자의 사정을 알리고 그날 오후, 지원을 약속받아냈다.

“이동신문고는 소외되고 낙후되어 도움의 손길조차 뻗을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찾아가죠. 직접 찾아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도움을 못 줄 때도 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받아냈어도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불평·불만은 고스란히 국민권익위 몫이다. 하지만, 민원이 해결됐을 때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민원인들이 있는 한 이러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10월에는 경북 경산시·청도군, 경남 밀양시를, 11월에는 전남 목포시, 장성군, 담양군을 찾아갈 계획이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민원인이 어떤 사연을 들고 찾아올까? 장대환 사무관은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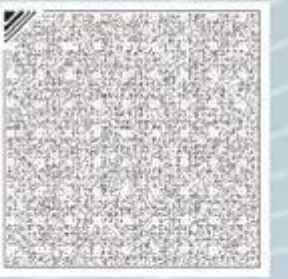


# ‘청렴도 만점을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부패방지 종합시책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한국전력공사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해 불을 훔쳤고 인간은 그 불로 인해 추위에서 벗어났고 어둠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스·로마신화에 프로메테우스가 있었다면, 현재 우리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KEPCO)가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 좋은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KEPCO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를 KEPCO 직원들은 ‘청렴함’에서 찾는다. 스스로 청렴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청렴함이 궁금하다.





## 청렴도 꼴찌에서 1등으로 탈바꿈하다!

처음부터 KEPCO가 청렴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2002년, 2003년에 KEPCO는 공기업 중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러자 'KEPCO 공기업 청렴도 2년 연속 부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2003년 4월 15일 '윤리경영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그 당시 최고 경영자는 “오늘 이후부터 단 3만 원이라도 불법수취한 직원은 인사권자인 KEPCO사장으로서는 면직시킬 것입니다”라고 공표했다. 이것은 'Clean KEPCO'로 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2004년, KEPCO의 청렴도는 8.72점으로 2002년의 4.47점과 비교했을 때 비약적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005년 8.78점, 2006년 9.08점, 2007년 9.56으로 19개 공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고, 드디어 2008년도에는 9.52점을 얻어 381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와 전 직원 청렴의식의 확산입니다”라고 말하는 '청렴윤리팀'의 한명관 팀장은, KEPCO는 “고위직간부 자율 재산등록제도, 고위직 간부 청렴생활 강령 실천서약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12월에는 본부장, 본사 처(실)장 및 1·2 차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간부청렴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 'Clean KEPCO' 우리가 책임진다!

KEPCO의 높은 청렴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청렴T/F팀'과 청렴시책을 총괄 추진하는 '청렴윤리팀'이다. 상임감사위원이 주관하고 본사의 주요 처(실)장들이 함께 운영하는 청렴T/F는 청렴도 향상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핵심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기관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반부패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전략과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2009년도에는 내부업무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핵심시책을 발굴하는데 집중했다.

청렴T/F가 반부패 시책을 개발한다면 청렴윤리팀은 그 시책을 총괄 추진한다. 청렴윤리팀의 대표적인 업무는 KEPCO가 자랑하는 청렴프로그램인 '청렴컨설팅'이다. KEPCO는 부패경로 추적과 함께 조직의 부패 수준을 진단하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대책 마련을 위해 1년에 2회 전사적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시행한다. 청렴도 부진 사업소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사업소를 방문하여 청렴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소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반부패 서비스 즉, '청렴컨설팅'을 제공한다. 청렴컨설팅

1. 내부규정 담당자 회의를 갖고 있는 KEPCO 감사실 2.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이끄는 KEPCO만의 임직원 행동강령 3.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다짐을 하고 있는 KEPCO 사장 김쌍수(사진 오른쪽), 노조위원장 김주영(사진 왼쪽) 4.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김성진 감사실장 5. 부패방지 종합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 받은 KEPCO 6. KEPCO의 청렴시책을 총괄 추진하는 청렴윤리팀





팅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통한 바람직한 개선안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결과 2008년도 중점관리대상 43개 사업소 중 39개 사업소의 청렴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직원이 ‘청렴함’을 하나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KEPCO는 전 직원의 참여를 위해 청렴마일리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가진단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는 직원들의 다양한 청렴추진활동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청렴포탈사이트에 의견을 게재하거나 자료등록 및 열람 또는 부패방지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 추천할 경우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 Clean KEPCO의 뿌리는 ‘청렴교육’

직원 2만여 명이 하나가 되어 직원 개개인이 높은 청렴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청렴교육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KEPCO는 교육대상별 차별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청렴교육 전문과정’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전국 사업소의 청렴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또한 사업소 부패 사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KEPCO는 사이버 청렴교육 또한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이버 청렴교육 콘텐츠’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후 KEPCO에 맞게 콘텐츠를 재가공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내부공익신고 등 총 20차시로 진행되며 현재 총 5,000여 명이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다.

KEPCO에는 큰 꿈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청렴도 평가에서 9.9점을 획득하는 것이다. 현재 KEPCO 직원들은 2008년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종합대상’ 수상과 더불어 부패방지 종합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에 고무되어 ‘Clean Power -KEPCO 9.9’ 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Clean KEPCO’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직원들의 눈빛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청렴기관 KEPCO, 부패지수 9.9점을 받은 최초의 공기업, KEPCO’가 멀지 않았음을 짐작해본다. 🌍

## ‘Clean Power -KEPCO 9.9’







#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맙시다!



## 공무원 행동강령

###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H시청의 도시개발국장인 공무원 K씨.

평소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주위 많은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K씨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걱정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늦둥이 막내 동생이 벌써 1년째 실직상태로 집에만 있는 것이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K씨에게 '혹시 동생이 들어갈 만한 회사를 알아볼 수 없느냐'는 전화를 종종 하셨다.

K씨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생의 취업을 도와주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일임을 알기에 함부로 동생의 취업을 청탁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직무와 연계되어 있는 OO주택건설업체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오랜 고민 끝에 그 회사에 어렵게 동생의 취업을 부탁했다. 물론, 그는 OO주택건설업체 사장에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그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





# 感, 어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사방이 울긋불긋하여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햇살에 익어버린 은행잎과 단풍잎을 품은

우리의 산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내 떠나는 가을이 아쉬운 듯 가을바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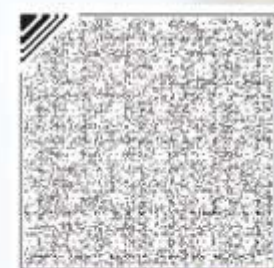
하늘하늘 춤을 추는 코스모스처럼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만끽하는 것은 어떨까요?

- 36 | 세상사는 풍경
- 38 | 여행의 재발견
- 42 | 문화로 보는 세상
- 44 | 돈버는 방법
- 46 | 생활법률110







# 토요일에는 나눔이 있는 장터로 GO!

## 독섬 아름다운나눔장터

매주 토요일 오전 서울 독섬유원지 광장에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든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를 비롯해 학생, 할아버지 등 사람들의 양손에는 하나같이 큰 짐꾸러미가 들려 있다. 잠깐 사이, 수백 명의 참가자(장돌뱅이)들은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펼쳐 놓는다. 이곳저곳에서 '구경하세요, 없는 게 없어요' 라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는 바로 자원의 순환과 나눔을 전파하는 아름다운가게가 운영하는 '독섬 아름다운나눔장터'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벼룩시장' 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터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싸고 쓸 만한 물건들을 찾아 몰려든다.





1. 어릴적 가지고 놀던 인형을 팔려나온 서양하 학생과 어머니 2. 곰돌이 인형을 사고 파는 아이들 3. 수익금의 10%를 기부하는 장돌뱅이 소녀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독섬 아름다운나눔장터’ ([www.flea1004.com](http://www.flea1004.com))는 매주 토요일 12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오늘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팔기 위해 모인 장돌뱅이들(행사 참여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유치원 다닐 때 가지고 놀던 피카츄 인형을 팔러 온 초등학생부터 머리핀을 한가득 들고 온 여고생,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망원경을 파는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다.

“양하님 s 가게입니다. 인형 싸게 팔아요. 인형 하나 천 원~” 자신의 이름을 따, 가게 간판까지 준비한 서양하 학생(13, 서울 토성초)은 오늘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인형들을 준비했다. 서양하 학생의 목소리가 지나가는 꼬마 손님의 발길을 잡았다. 곰돌이 가방이 마음에 들었는지 한 아이는 지퍼 작동이 잘되는지, 털 빠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핀 뒤 그제서야 “얼마예요?” 라고 묻는다. 가격은 단돈 이천 원.

이곳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은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처분한다는 장터의 취지를 반영해서 무척 저렴하다. 서양하 학생은 “어릴 때 아빠가 사주신 인형들인데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가지고 놀면 좋을 것 같아서 팔러 나왔어요. 버리지 않으니까 쓰레기도 안 생기고 그러면 환경도 지킬 수 있잖아요”라며 인형이 거의 다 팔려 기쁘다며 싱글벙글이다. 이런 딸을 바라보는 남소영(42,주부) 씨는 딸이 벼룩시장을 통해 자원 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 좋다며 다음에는 아들까지 함께 데리고 나올 예정이란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만난 이민석 할아버지(70, 서울 대흥

동)는 가지각색의 중절모들을 내놓았다. 모자를 너무 좋아해서 이곳저곳 지방에 갈 때마다 구입했다는 중절모가 족히 50개는 되어 보인다. “이 중에는 한 번만 쓴 것도 많아, 아버지한테 하나 선물할 터?”라며 모자 하나를 건넨다.

### 환경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눔장터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아름다운나눔장터’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장터에 참여한 팀만 8천여 팀이며 이들이 기부한 금액은 약 2천 90만 원, 새 주인을 만난 중고물품들은 30만 개가 넘는다. 장돌뱅이들이 기부한 기부금은 인도 빈곤지역의 어린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유치원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나눔장터를 관리·감독하는 박설경 감사는 “헌 물건을 직접 들고 나와 판매하고 수익금의 10% 이상을 기부해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라며 “눈길을 끄는 이색 간판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판매 전략이라 덧붙였다.

여유를 가지고 장터를 구석구석 살펴본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물건, 낡은 물건이라는 생각을 떨칠 만한 깨끗한 책, 장난감, 인형, 옷가지들을 만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쉽게 구할 수 없었던 한정 모델의 제품을 손에 질 수도 있다.

시원한 가을, 누군가의 애물단지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보물단지로 바뀌는 특별한 곳, 아름다운나눔장터로 가족나들이를 떠나는 것은 어떨까? 🌍





풍요로움의 땅, 청백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

홍성

## 청백리 홍주목사 유의(柳誼)를 찾아 떠난 역사여행

수많은 여행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그건 대부분 특정한 형태로 굳어진 여행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나서는 것, 그러한 시도는 새로운 풍경에 우리를 당도하게 할 것이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청렴한 위인의 자취를 찾아 떠난 여행지에서 뜻밖에 일본에 맞선 독립투사의 모습도 덩으로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산과 바다가 어여쁘게 어우러져 있는 땅, 청렴함과 독립의 투지가 불탔던 선조들의 발자취가 숨 쉬는 땅, 홍성. 홍성여행에서 선조들의 청백리 정신과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껴보자.





가을이 성큼 다가온 홍성에서 만난 첫 번째 풍경은 홍주성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원사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얼굴을 만날 수 없었다. 우두커니 바라보는 필자를 향해 한 어르신이 친절하게도 홍주성에 대해 귀뜸해 주신다.

“봄인가 90년 만에 홍주성 서문 위치를 확인하면서 홍주성의 복원이 시작됐지. 지금 이렇게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홍주성이 옛날엔 웅장했어. 남대문 안 부러웠었지.”

어깨를 활짝 펴고 기세 좋게 이야기하시던 어르신의 말씀처럼 그 옛날 홍주성은 남부럽지 않은 곳이었다. 지금은 흔적만 남은 홍주성곽이 과거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

## 청백리 공간 위를 한가로이 거닐다

홍주성 안으로 들어가면 홍주아문이 자리하고 있다. 한때 군청의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홍주아문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목조건물이다. 이곳 안으로 들어서면 군청 청사가 나오고 뒤편으로 홍주목을 다스리던 목사가 머물던 안회당이 보인다. 이곳에서 유의(柳誼) 선생은 청렴결백을 신념으로 임금의 뜻을 받들며, 백성을 다스렸다.

유의(柳誼) 선생은 영조 10년에 태어나 영조 4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1797년에 홍주목사로 부임했다.

유의(柳誼) 선생은 관에 대한 백성의 경비부담을 줄여달라고 조정에 건의하는 강직함과 청렴한 성품을 지녔다. 그와 관련된 일화가 많은데 그중에 그가 목민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자신의 업무에 있어 매우 철저하여 사소한 청탁도 받지 않았고 절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정약용 선생이 유의 선생에게 말했다.

“나라의 일에 있어 단 하나의 어그러짐도 허용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융통성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유의 선생은 “임금께서 나를 홍주의 목민관으로 임명하신 뜻은 홍주의 백성을 나에게 맡겨 그들을 구휼하고 비호하도록 하신 것이네. 조정에 있는 고관의 부탁이 비록 무겁기는 하나 어찌 임금의 명령보다 높겠는가. 만일 내가 편파적으로 한 사람만 찾아보고 특혜를 준다면 이는 왕의 명을 어기고 한 사람의 사사로운 명을 받드는 것이니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했다. 이는 당시 청탁과 관련된 사사로운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던 유의 선생의 강직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일화라 할 수 있다.

유의 선생이 집무를 보던 안회당을 보고 있자니 문득 수많은 청탁을 뿌리치고 임금의 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고종 때 지어진 안회당은 ‘노인을 편안히 모시고 벗



1. 홍주목사들의 쉼터였던 여하정 2. 홍주목을 다스리던 유의가 머물던 안회당 3. 홍주목사의 관아는 현재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4. 김좌진 생가는 꽤 너른 터에 자리 잡고 있다 5. 한용운 선생의 생가에는 소박함과 검소함이 느껴진다



4



을 믿음으로 하며 연소자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노자의 뜻이 담긴 것으로 유의 선생이 임금의 뜻을 잘 받들어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안회당은 현존하는 유일한 관아건물로서 여전히 홍주목사들의 얼굴을 기르고 있어 가치가 높다. 사실, 홍주성 안에는 관아건물만 35채나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만들거나 관청을 만든다는 이유로 성내의 건물을 철거해 안회당만이 유일하게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뒤로하고 안회당 뒤뜰로 발걸음을 옮기면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보이는 곳에 작은 정자가 있는데 '여하정'이라 부른다. 홍주목사들이 집무를 보던 중 휴식처로 활용했다던 여하정은 작은 연못 안 사각형의 섬 위에 정자를 짓고 다리를 놓아 연결한 쉼터다. 수많은 홍주목사가 심신을 달랬을 여하정은 주위가 울창한 고목들로 에워싸여 있고 너른 그늘을 만들어주어 사시사철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을 듯싶다.

취재 차 간 날에도 가족단위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꽃을 피우기도 하고, 너른 잔디 위를 씽씽 내달리며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도 "선조들이 물려준 이 땅이 더할 나위 없이 고맙다"고 이야기한다. 백성을 다스리던 관아에서 시민들이 찾는 휴식처가 되고 있는 이곳은 장소의 역할이 바뀌었지만 백성을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 독립정신이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을 가다

이를 뒤로한 채 만해 한용운 선생과 백야 김좌진 선생의 생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는지도 모르겠다. 홍성은 독립투사들의 격전지였던 만큼 청림여행에서 만난 또

5



다른 수확이다. 홍주성에서 결성 방향으로 가면 왼쪽으로 김좌진 장군 생가와 사당이 자리한 생가지를 만난다.

갈산면 행산리의 생가지 입구로 들어서면 커다란 비석이 있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전시관이, 왼쪽에는 생가가 자리하고 있다. 먼저 돌아볼 곳은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김좌진 장군의 흉상을 볼 수 있으며 흉상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장군의 생애가 펼쳐진다. 전시관을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장군의 생가가 있고 생가터에는 안채와 사랑채, 곡식을 넣어두던 광이 있다. 그리고 장군의 서책이 놓인 방 앞으로 툇마루가 있다. 건물 끝 부분의 툇마루를 한 칸 높여 누각처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장군이 독립자금을 모으다 일본군에게 쫓겨 숨어 지내던 시절에 썼다는 주련도 눈여겨볼 만하다.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에서 결성방면으로 내려가면 성곡리에 자리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를 만날 수 있다. 선생의 생가는 방 두 칸에 부엌 한 칸이 달린 일자형의 초가집으로 방 안에는 만해 선생의 영정과 낡은 뒤주 한 개, 호롱불 하나가 방문자를 반긴다. 한쪽 귀퉁이가 깨진 막사발이 소반에 얹혀 있는 부엌에는 가마솥이 걸려 있고, 부엌 옆에는 장작을 쌓아둔 헛간이, 사랑방 옆에는 나무 동치를 파내어 만든 나무 절구통과 맷돌 등이 보관되어 있다. 초가집을 둘러보면서 한용운 선생의 검소함, 소박함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홍성여행은 청백리 유의 선생을 찾아왔지만 우연한 기회에 새로움이 있는 풍경을 만나 홍성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함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홍성은 꼭 한 번 찾아가 봐야 하는 여행지이다. 청림과 독립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특별한 여행으로 안내해 준 홍성이 고마울 따름이다. 🌍







그라민은행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무함마드 유누스에 의해 1983년 설립되어,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오로지 ‘신용’ 하나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그라민은행의 시작은 굉장히 단순하고 상식적이었다. 경제학자인 유누스는 방글라데시 남부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라민은행을 설립했다. 어느 날 그는 대학 주변에 있는 마을을 거닐다가 작은 대나무 의자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나가는 한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재료를 살 돈이 없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고안해 실험적으로 운영해보기로 했다.





그라민은행 회원들은 대출로 인해 삶의 희망을 찾았다.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고 사회는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상식적인 생각, ‘이 생각’이 정식 은행창립으로 이어지기까지 12년의 세월이 실험에 소요되었다. 유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신용이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있는 특권이라는 잘못된 신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과 그 마을에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매우 능력 있고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스스로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 돈 빌려줄지의 여부는 은행이 아니라 고객이 결정

그라민은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은행과 다르다. 먼저 은행의 주 고객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도시가 아닌 ‘농촌’에만 있다. 또한, 남성위주의 고객이 아닌 ‘여성’ 고객이 대다수다. 이것은 은행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존의 통념을 뒤흔드는 방식이다.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빌리는 여성의 가족이 소유한 자산은 은행이 정한 기준 아래’임을 입증해야 하며, 담보나 보증은 필요 없다. 대신 돈을 빌리는 사람은 ‘5명의 채무자로 구성된 모임과 이런 모임 8개가 모여 40명의 채무자로 구성되는 센터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에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지의 여부를 ‘은행이 아니라 바로 이 모임’에서 결정한다. 다섯 사람이 제때 빚을 갚으면 그 뒤로도 계속해서 돈을 빌릴 때 신용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빌린 돈은 한꺼번에 갚지 않고 적정 수준의 이자를 붙여 매주 조금씩 나누어 갚는다. 이것이 바로 그라민은행 운영의 핵심인 소액신용대출의 기본 원칙이자 이 은행의 회원들이 돈을 빌리고 갚은 일상적 구조이다.

이런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 책은 창업자 유누스뿐 아니라 그라민은행 직원들의 헌신과 종횡무진 발걸음에도 집중한다. 대도시의 깔끔한 사무실에 앉아 고객을 응대하는 보통의 은행직원과 달리, 그들은 회원들을 직접 만나러 가기 위해 악천후 속에도 방글라데시 농촌의 진흙길을 걷는다. 그들은 가난한 농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했다.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믿지 못할 제안에 어리벙벙해하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마침내 사람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하기 시작했고, 그라민은행이 뿌린 ‘희망의 종자돈’이 삶의 종자돈이 되어 자립과 자활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2009년 현재 그라민은행은 방글라데시 전역에 걸쳐 84,237개의 마을에서 2,554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돈을 빌린 사람은 780만 명이고 고객의 97%는 가난한 여성이다. 은행이 대출한 돈은 79억 7천만 달러에 이르며, 상환율은 정확히 97.94%이다. 이처럼 그라민은행은 빈곤층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유누스와 함께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라민은행의 성공은 방글라데시를 넘어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 올해 초 137개 나라의 2,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워싱턴에 모여 세계 최초의 ‘국제 소액신용대출 정상회의’를 열었다. 국내에도 그라민은행의 한국지부인 ‘신나는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그 외에 아름다운 재단, 사회연대은행 등의 소액신용 대출 기관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윤킨이의 말의 한 대목을 대신하여 마지막 문장을 단는다. “**소액대출 사업은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떠나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빌리는 사람이 서로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라민은행은 방글라데시 사회에 맞게 개발된 것이므로 우리 실정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라민은행의 직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 현장 중심의 활동, 그리고 돈을 빌린 회원들끼리 소모임을 조직해 대출금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제도는 우리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은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www.hopebank.or.kr](http://www.hopebank.or.kr))에 문의하면 된다.





돈 버는  
방법

4<  
4  
ACRC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서민이여,

정부정책을 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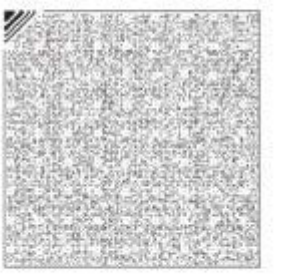
돈이 보인다!

하반기부터 바뀐 제도



정부가 공공개혁, 녹색성장, 법질서확립 등 여러 슬로건을 뒤로 하고 친서민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대책을 내놓고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새로 도입되는 서민정책은 크게 건강과 생계,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서민을 지원해도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들이 모르고 지나치면 무용지물! 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자.





## 건강은 행복의 제1조건

부자건 서민이건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에게 우환이 있다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선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보험료로 월 1만 원 이하를 내는 약 50만 가구는 오는 2010년 6월까지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또 2009년 6월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가 월 132만 6천 원 이하인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줄어들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입원비 상한선도 6개월간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아진다. 상한선을 넘어서는 입원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한편 12월부터는 저소득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한방 물리치료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5~14세 어린이의 충치를 막기 위해 어금니 홈을 메우는 치과 치료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희귀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다. 이미 7월부터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절반 줄어들었다. 12월부터는 암 환자 본인부담률도 10%에서 5%로 줄어든다.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환자 등록신청 후 5년간 진료를 받을 때 마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사의 확진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신청하면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이 갑작스레 중대한 질병에 걸려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4만 가구만이 대상이었으나 하반기에는 9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났으므로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129)에서 상담하고 있다.

## 돈에 숨통이 트인다!

건강을 챙겼다면 다음 문제는 생계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추진기구를 전국 200~300개 네트워크 망으로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증이나 담보 없이 소액자금을 대출해주고 생계형 창업 컨설팅이나 마케팅까지 지원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연 2% 고정금리로 최장 5년까지 빌려준다.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뱅크

또는 금융위원회의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16만 7,000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생계비 대출을 실시한다. 3~5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되므로 상환 부담도 줄었다. 지난 6월말부터 시작돼 현재 신탁 등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청 콜센터(☎1357)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7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이 발행됐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시장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매매한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권이 있으며 상품권 이용자에게는 주차장 할인쿠폰 등을 준다.

##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 혜택 이모저모

교육은 서민들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하지만 학비가 없어 공부를 할 수 없거나 학비를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많다. 차상위 이하 35만 가구에 대해서만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7월부터 소득 하위 50%로 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62만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차상위 11만 가구는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더라도 월 10만 원의 보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던 보육료 지원금을 9월부터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사랑카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에 카드발급을 문의하면(☎1566-0233)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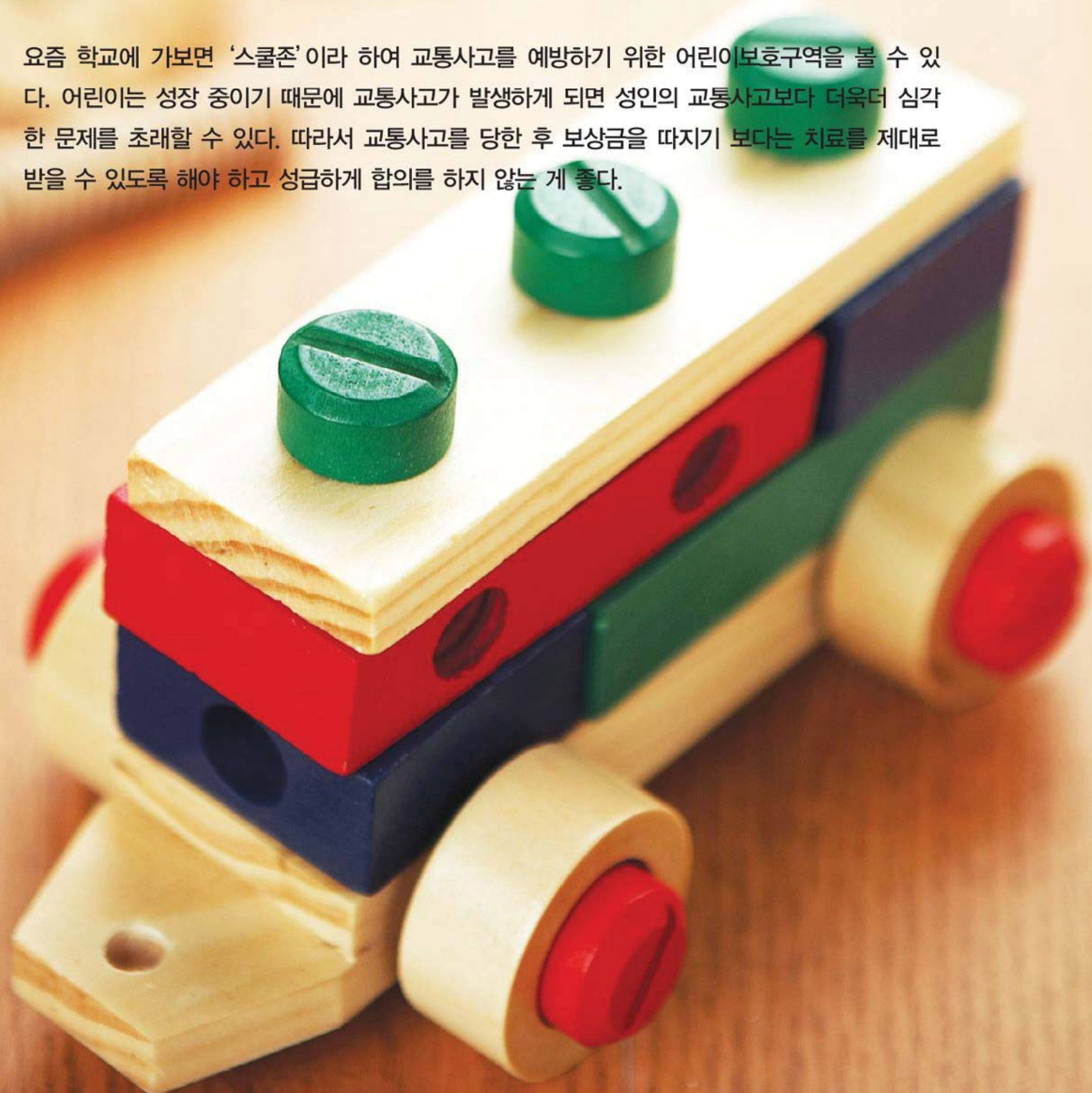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올 2학기부터는 학자금대출이 최대 1.5% 포인트 이자가 감면된다. 현재 평균 7.3%인데 5.8~6.3%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리고 소득 하위 20%만 받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하위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

## ☎ 서민을 위한 정부 혜택이 더 알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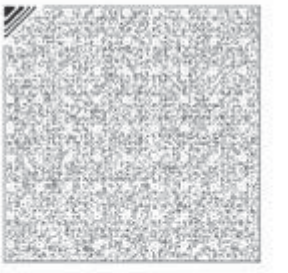
- 정부민원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긴급복지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마이크로크레딧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저신용 근로자 생계비 대출 - 중소기업청 콜센터 ☎1357
-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요즘 학교에 가보면 ‘스쿨존’이라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볼 수 있다. 어린이는 성장 중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성인의 교통사고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상금을 따지기 보다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급하게 합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Q** 초등학교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5살이 된 딸이 있다. 아침에는 유치원에 직접 데려다주지만 오후에는 유치원 선생님이 가게 건너편까지 데려다 준다. 어느 날, 새로 온 인솔교사가 아이를 바래다주기 위해 가게 건너편까지 왔고 가게 위치를 묻는 사이, 아이가 가게를 알려 준다며 찾길로 뛰어드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다. 이 때, 아이의 부모 김 씨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이 경우에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의 과실과 유치원 선생의 과실을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이 속도를 30km/h 이상 달렸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유치원 인솔교사 역시 아이들을 제대로 인솔하지 못했으므로 아이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어린이는 성장 중에 있음으로 선부르게 합의하지 말고 치료 성과를 본 다음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고 한다. 어린이의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보행, 차량동승, 자전거 순인데, 특히 보행 중 사고가 70%라고 하니 교통사고 안전교육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누구의 과실이 크냐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지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호능력이 낮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각종 판례 및 「도로교통법」 등을 기준으로 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의 준수 여부, 사고현장의 도로상황, 사고시간 등 여러 가지 사고환경에 따라 과실 적용률이 달라진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배상 및 합의는, 치료비·학습장애에 따른 위자료, 장애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사고 후 부상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누어진다. 단 어린이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실수입을 받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다.

### 치료비

치료비는 입원치료, 통원치료, 정밀검사비용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는 성장 중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시 나타나지 않았던 후유증이 시간이 지나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후유증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하여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다. 이는 장애가 남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위자료는 함부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의사전달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후유증이나 장애여부를 뒤늦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경과를 보고 후유증과 장애여부를 확인한 후 합의하는 것이 좋다.

뿐만아니다. 유치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해 입게 되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아이가 다친 것으로 인해 아이의 부모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Tip 어린이를 위한 교통사고 대비 네 가지 습관

1.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들인다. 아이들은 먼저 뛰어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2. 운전자와 눈을 맞추는 습관을 길들인다. 녹색 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꼭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건너는 습관이 중요하다.
3.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을 길들인다. 운전자의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를 보고 건너는 습관을 길러준다.
4. 손드는 이유와 손드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준다. 어린이가 손을 드는 이유는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추어주세요’ 하는 의사 표시이므로 손은 반드시 차에 가까운 쪽을 운전자를 바라보며 45도 각도로 들어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더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고객감동 M.O.R.E 매뉴얼 발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무원(조사관)들이 민원처리 때 지켜야 할 『고객감동 M.O.R.E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에는 방문민원과 전화민원 등 민원의 다양한 접수유형에 따라 조사관이 단계별로 지켜야 하는 행동 요령과 응대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 외에도 ▲국민을 가장 화나게 하는 공무원의 7가지 태도, ▲고객만족의 필요성, ▲표정·복장 등 고객맞이 기본예절, ▲방문·전화·현장고객 응대요령, ▲불만처리기법 등이 담겨 있다.

국민권익위는 『고객감동 M.O.R.E 매뉴얼』을 전 조사관들에게 배포·교육해 민원을 처리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캄보디아’ 한국을 모델로 옴부즈만 설치

지난 7월 28일 탄자니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한국의 반부패정책의 전략과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다. 탄자니아 공무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청렴도 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등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부패신고 및 심사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또한 지난 7월 29일에는 캄보디아 법제사법개혁위원회 관계자들이 국민권익위의 옴부즈만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를 방문했다. 캄보디아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국민권익위 조직과 기능, 고충민원처리 체계와 절차,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캄보디아는 이번 정책연수를 참고하여 국민권익위를 모델로 한 옴부즈만을 설치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지난 8월 21일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이 국민권익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은 국민권익위의 활동상황이나 주요 업무 등을 외부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국민권익위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에 민원해결, 국가의 반부패·청렴정책과 관련된 글과 사진을 게재하는 일을 하게 된다. 블로그 기자단은 국내와 미국, 중국 등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주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블로그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내용과 국가정책정보 및 우리 사는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 20일 개설된 이후 20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네티즌과의 친숙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전남지역 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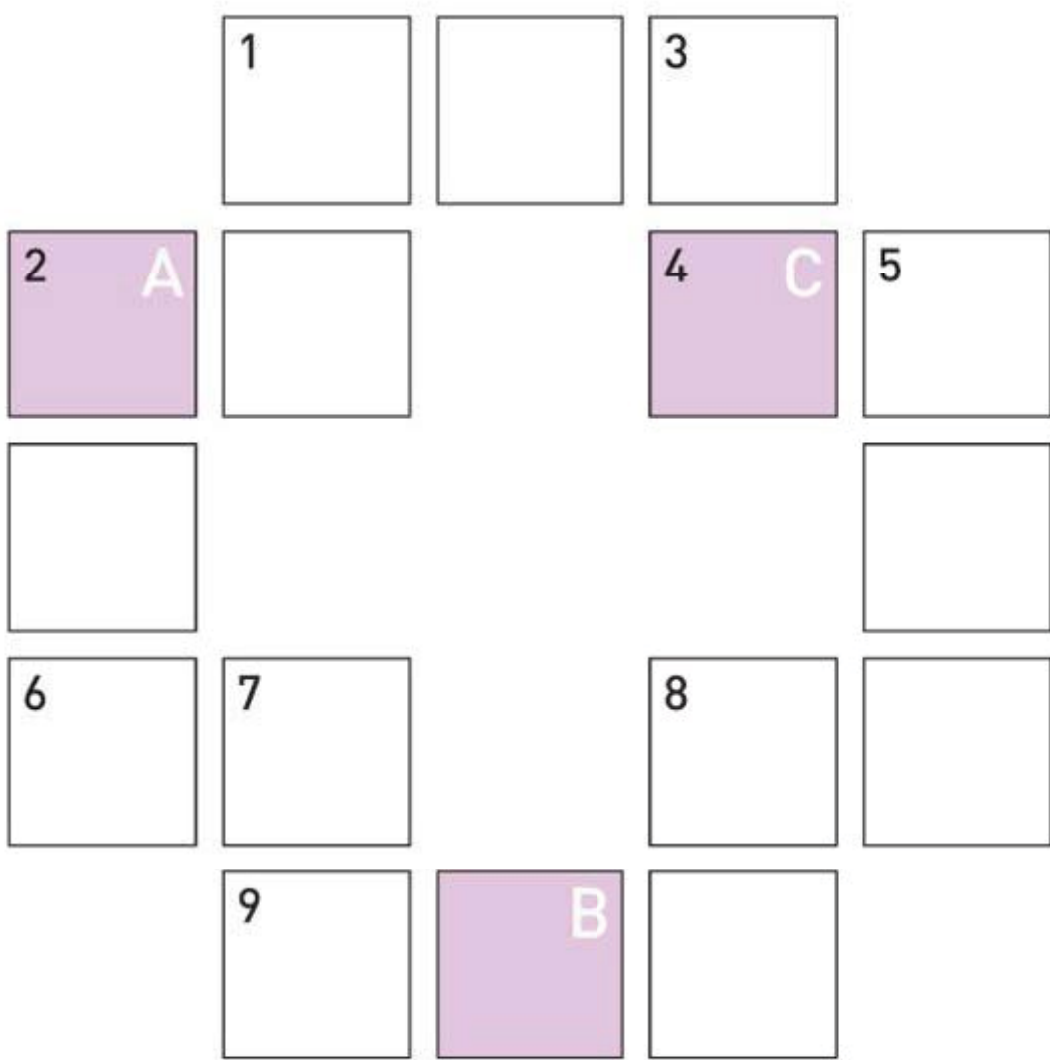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가 지난 8월 26일 해남군, 27일 영암군, 28일 나주시에서 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상담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충청북도 청원군과 음성군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8월까지 총 17개 시·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합의 138건, 고충민원접수 142건, 상담안내 539건 등 총 819건의 민원상담 처리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사연도 보내고~! 퀴즈도 풀고~!

『국민권익』은 독자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10월 25일)



문제〉 가로세로 십자퍼즐, 핵심단어를 찾으세요!

### 가로 열쇠

1.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2. 구(球)의 절반, 또는 그런 모양의 물체.
4. 재산을 다 써 버려 집안을 망침. ○○망신
6. 믿지 아니함. 또는 믿을 수 없음.
8. 한 번 배웠던 학과 과정을 다시 배움. 특히 입학시험에 낙방한 뒤에 다음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하는 것을 이른다. ○○생
9. 정부가 쌀값 조절을 위하여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쌀.

### 세로 열쇠

1. 집안 살림에 쓰는 기구. 주로 장롱 · 책장 · 탁자 따위와 같이 비교적 큰 제품을 이른다.
2. 반딧불이의 공무니에서 나오는 빛.
3. 벼슬아치가 공무로 지방에 나갈 때 역마를 징발하는 증표로 쓰던 둥근 구리 패.
5. 거리의 미관과 국민 보건 따위를 위하여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7. 양력 1월 1일. '양력설'을 구정(舊正)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8. 아기가 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공부에 ○○를 붙이다.

지난 호 퀴즈 정답  
이순신

7+8월 퀴즈 당첨자  
노일출, 안동원, 강상철, 선찬영, 주영천

※ 문제 십자퍼즐을 채운 후 A, B, C에 들어갈 낱말을 조합하신 후 독자엽서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 퀴즈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 노일출(대구광역시 달서구)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작은 목소리를 대변 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기사가 국민권익지에 많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 안동원(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족여행을 계획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

행의 재발견' 기사에서 소개한 통영이 바로 우리 가족이 찾고 있던 곳이더군요.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은 아이들에게 유익한 현장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 강상철(서울시 서대문구)

'청렴한국의 미래, 청소년이 만든다' 기사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청렴의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 선찬영(인천광역시 부평구)

제2회 전국고등학생 청렴논술대회 최우수상 수상작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피부에 와 닿는 주제였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저희 아이에게도 대회 참가를 권해보려고 합니다.

### 주영천(경기도 남양주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인구의 십분의 일도 안되는 작은 나라지만 배울 점이 참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CPIB처럼 우리나라도 강력한 반부패기관을 통해 청렴 선진국 진입을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독자소리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 서민금융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신용 7~9등급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신협 6.30~, 농협·우리 7월~, 국민 8월~)
-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기관 300곳 확대
- 노점상·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3.4조원 추가(6월)

## ●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분양·국민임대주택의 10% 배정(8월)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8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주택임대료 16% 인하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곳 현대식 화장실 설치

## ● 서민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4세의 50%는 보육시설·유치원비 전액 지원(7월)
- 차상위계층의 0~1세는 집에서 돌봐도 10만원 지원(7월)
- 소득3분위 가구의 대학생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2학기)

## ● 영세상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형마트 진출시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운영(7월)
- 전국 전통시장 공용 상품권 발행(7월)
- 여행 새로 일하기센터의 주부인턴·취업훈련 확대(7월)

## ● 암환자, 어린이의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인하(7월)
-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12월)
- 한의원 물리치료 및 어린이 충치 홈메우기 보험적용(12월)





한가위처럼 늘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음까지 풍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으로

가을의 풍족함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더욱 더 힘을 내어

국민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려 합니다.

올 가을에도 하하호호 웃음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